2018 공공기관 혁신계획

2018. 8. 29(수)

공공기관,
국민 곁으로

국방기술품질원

분야별 추진과제

1 공공성 강화

□ (과제 1)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 국방과학기술 조사·분석 활용성 제고 및 실효적 기술기획 강화

<중기혁신방향>

'18년 계획	'19년 계획	'20년 계획	'21년 계획	'22년 계획
●WBS 기반의 무기체계 소요기술 상세 조사·분석 시범 연구 ●사전기획 기반 미래 유망기술 10대 분야 기술주도형 미래신기술 도출 ●필수 소요 전력 적기 전력화를 위해 하향식 자체기획을 통한 핵심기술과제 식별	●획득단계별 조사항목 및 내용 구체화 ●무인로봇 분야 기술주도형 미래신기술 심층 분석 ●국방분야에 활용가능 기술을 보유한 우수 중소/벤처기업 보유 기술 추가식별을 위한 하향식 자체기획	●WBS 기반 조사·분석 정보의 체계적 관리 ●인공지능 분야 기술주도형 미래신기술 심층 분석 ●미래전장 관련 인공지능, 네트워크 분야 소요기술 추가식별을 위한 하향식 자체기획	●무기체계 획득 전순기에 국방과학기술 상세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 향상 ●에너지 분야 기술주도형 미래신기술 심층 분석 ●미래전장 관련 센서, 파워 분야 소요기술 추가식별을 위한 하향식 자체기획	●조사·분석 정보의 체계적 관리 고도화 및 활용도 제고 ●기술주도형 기획을 통한 미래신기술 도출 고도화 ●하향식 자체기획 고도화 및 하향식 과제사업 확대

<현실태 및 문제점>

❍ 국방과학기술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심층 조사·분석 요구

- 現 조사·분석은 WBS 상위 레벨 기술에 대한 정성적 수준 판단으로 실효성 저하
- 소요기획·선행연구 등 획득단계별 활용성 증대를 위한 상세 기술분석 방법론 개발 필요

❍ 첨단 무기체계개발을 위한 Key-Tech 중심의 국방기술기획 요구

- 일상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 기획 및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무기체계 심층기획 요구

❍ 新 작전수행개념 소요전력 및 필수전력 중심의 핵심기술과제 기획 요구

- 개발자 위주의 상향식 소요공모 체제와 별도로 신규 소요전력 및 필수전력을 중점으로 기획자 중심의 하향식 핵심기술기획을 통한 R&D 전략 적기구현 및 실효적 기획 체제 강화 추진

<'18년 주요 추진계획>

❍ 국방과학기술 조사·분석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업무 전환

- 업무 전환 추진계획 수립 (~8월)
- 조사 대상 무기체계 WBS 작성 (~11월)
  * 운용 유사체계 기술자료묶음(TDP)을 활용하여 WBS 세밀하게 분할
  * 유사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WBS 효과적 구성방안 수립
- 단위기술에 대해 상세한 조사·분석 수행 (~11월)
  * 구성품 단위 실질적 기술보유 중소·벤처기업들까지 포함
- 조사·분석 결과 활용성 분석 (12월)
  * 차기년도 조사·분석 대상 무기체계 및 항목 선정

❍ 전력소요와의 연계강화 및 미래 무기체계 선도를 위한 기술기획 수행

- 전력소요기획 및 연구개발 활용성 증대를 위한 핵심기술로드맵 수정(과제반영도 등) (~11월)
  * 중점기획대상 24개 및 일반기획대상 무기체계 26개 핵심기술로드맵 수정
- WBS분석 기반 핵심기술로드맵 수립 (~11월)
  * '17년 이후 소요결정 무기체계 3개 WBS 분석
-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신기술 발전방향 수립 (~11월)
  * 미래 핵심전력 개념 선도할 수 있는 미래신기술 식별 및 발전전략 제시

❍ 첨단 무기체계 소요기술 중심의 핵심기술 과제기획

- 신규 핵심기술의 무기체계 연계율 강화 (~11월)
  * 대상 사업 :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 무기체계 획득 소요기술 우선 과제화 (소요기술 연계율 70% 이상)
- 미래 전장을 위한 기술주도형 과제 추진 (~10월)
  * 대상 사업 : 선도형 핵심기술, 핵심 SW
  * 센서, 네트워크 등 미래전장 관련 분야 집중 기획(미래 전장 관련 분야 60% 이상 기획)
- 필수 소요기술 하향식 자체 기획 강화 (~5월)
  * 한국형 3축전력, 센서, 인공지능 등 필수 소요 전력, 미래전장 관련 분야 소요기술 중심 과제기획 (총 20개 과제 이상)

정부 품질보증활동 효율성 향상

<중기혁신방향>

'18년 계획	'19년 계획	'20년 계획	'21년 계획	'22년 계획
• 개발단계 품질보증활동 정책 연구 및 이를통한법규 개정소요 발굴·제기 • 현장품질지원반 효율성 제고 • 시험방법 프로세스 정교화 과제 다양화 • 다빈도 결함품목 개선과제 수행 • 품질종합정보체계 2단계 구축	• 개발단계 품질보증활동 정책·제도 수립 • 현장품질지원반 제도 정착 • 시험방법 프로세스 정교화 과제 확대 • 다빈도 결함품 개선과제 지속 수행 및 고장유형 데이터 수집 • 품질종합정보체계 3단계 구축	• 기품원 개발단계 품질보증 대상사업 확대 • 현장품질지원반 대상업체 확대 • 시험방법 프로세스 정교화 지속 추진 및 신규 개발장비 시험방법 구체화 방안 검토 • 다빈도 고장유형 데이터 분석 • 품질종합정보체계 고도화	• 기품원 개발단계 품질보증 대상사업 고도화 • 현장품질지원반 기술지원 고도화 • 규격화 단계 시험방법 명확화 추진 • 다빈도 고장유형 데이터분석결과를 활용한 설계반영 요소 연구 • 양산/운용 품질데이터 개발단계 환류방안 검토	• 기품원 개발단계 품질보증 대상사업 지속·발전 • 현장품질지원반 제도 지속발전 • 규격화 단계 시험방법 명확화 지속 추진 • 설계반영 요소 지속 연구 및 개발기관 정보 제공 • 양산/운용 품질데이터 개발단계 환류 추진

<현실태 및 문제점>

❍ 개발단계 사업관리 및 지원부서 간 역할분담과 활동방법이 미 정립되어 제한적 참여로 인한 양산/운용단계 품질 확보 한계

- 기품원의 제한적 개발참여, 자료접근 한계로 개발단계 품질보증 지원업무 효과 저조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국방 R&D 혁신 추진에 따른 군수품 품질정책/제도 개선 요구

- 기품원의 개발단계 품질관리 참여 확대 필요성 강조
- 체계적 개발단계 품질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품질정책 수립 필요

❍ 현장품질지원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변화 필요

- 대기업 협력업체 중심 운영에서 신규 계약업체, 영세 취약업체 및 중·소 계약업체 등 품질관리 역량 부족업체 지원으로 전환

❍ 규격자료에 제시된 시험·절차 미흡에 따른 품질 저해요소 발생

- 규격자료 재정비를 통한 시험방법 프로세스 개선 추진 필요

❍ 실용적인 품질종합정보체계 구축(2단계)을 위한 업무지원 필요

- 품보자료 D/B화 및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구축단계별 관련 요구사항 도출 등 현장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

  * 정보체계구축 사업관리는 정보화기획실 주관, 구축은 '19년까지 진행 예정

❍ 군수품에 대한 가치위주의 고장탐구 및 품질개선 활동 수행 요구 증대

- 다빈도 고장분석 과제 증가 ('17년 13개 → '18년 15개)
-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품질개선 효과분석과 이를 통한 개선과제 도출 필요

<'18년 주요 추진계획>

❍ 개발단계 품질보증활동 정책 연구

- 개발 품질보증 참여 범위 및 방법 연구
  - 개발/양산 단계를 연계한 기본 정책 방향 검토/보고
  - 개발단계 품질보증 프로세스 발전 세미나 개최
- 개발 품질관리 정책 구체화

❍ 체계개발사업 품질보증 참여 업무 수행

- 개발단계 품질보증활동 업무 수행
  - 개발단계 품질보증 참여 대상사업(30개) 선정 및 업무 수행 지시
  -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 파견 연장 타당성 검토/보고
  - 개발단계 품질관리 강화 시범사업 운용
  - '18년 개발단계 참여 성과분석/종합
- 제조성숙도평가 실효성 증대
  - 제조성숙도평가(MRA) 관리계획 수립
  - 모호한 평가문구의 명확화, 운영정의서(매뉴얼) 개정안 건의

❍ 중소업체 등 기술지원 및 기술자료 명확화로 양산품질 제고

- 현장품질지원반 효과성 제고
  - 현장품질지원반 계획 수립 (3월)
  - 분기별 실적 종합 및 보고 (6월, 9월, 11월)
- 국방규격상 시험절차 명확화

• 시험절차 명확화 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 선정 (3월)

• 시험절차 명확화 운영실적 결과 보고 (6월, 9월, 11월)

❍ 운용품질 확보 및 개선 수행

- 소요군 요구 품질문제, 선제적 개선사항 위주의 과제 선정 (3월)

• 야전운용제원분석, RAM 자료 분석을 통한 다빈도 고장품목 발굴

• 성능향상, 사용자불만 등 품질정보 분석을 통한 품질분석과제 발굴

- 다빈도, 품질분석과제 수행 간 효율적 관리 (중간, 최종 평가/보고)

• 과제별 수행내용 중간, 최종 평가 및 보고 (8월, 11월)

❍ 품질종합정보체계 2단계 구축사업 효율적 지원

- 품경본부(품경운영실 및 지역센터) TF 재편성 (5월)

- 정보체계 설계단계 업무협의 및 분석 지원 (~11월)

※ 2단계 구축사업의 경우 '19년 완료 예정으로 통합테스트는 '19년 중 예정

❍ 국방품질 관련 연구결과 발표 및 공유

- 연구결과 발표 및 공유를 위한 내용 보고서화 평가

❍ 지속적 품질개선 추진

- 가치공학, 경제성 위주 품질개선 지속적 수행

• 품질개선 경제적 효과 목표 : '18년 125억 절감, 4.0건/인당

□ (과제 2)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 혁신

일·가정 양립 문화정착

<중기혁신방향>

'18년 계획	'19년 계획	'20년 계획	'21년 계획	'22년 계획
•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확대 •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추진	• 가족친화경영 제도적 장치 및 기술 확대를 통한 실행력 강화	•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추진 • 중·장기 복지 정책 수립	• 가족친화지수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가족친화 경영 실적 관리 및 개선	• 가족친화지수 지속적인 관리 및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지속 •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재정비

<현실태 및 문제점>

❍ 본원 진주 이전에 따른 가정 친화 정책 추진

- 일·가정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 일가양득 캠페인 참여('17년), 유연근무제 활성화('16년 270명, '17년 352명)
-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활용을 통한 일·가정 양립 여건 지속 개선 필요
  * 정시퇴근 문화 조성 노력(가족 사랑의 날 캠페인 지속 실시)
  * 육아휴직제도 활용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 완화('16년 8명, '17년 7명)
- 가족친화인증 유지를 위한 가족친화경영실적 안정적인 관리 필요
  * 가족친화인증 획득('15년, 유효기간 3년)

<'18년 주요 추진계획>

❍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 및 조직문화의 확대

-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
  *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원(3월2일), 이용 중인 직원 16명('18년6월 기준)
- 스마트워크 적극적 활용 독려 및 정시퇴근 문화 확산
  * PC-OFF 주2회 시행('18년4월11일~계속)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근무제도 개선(시차출퇴근형, 집약근무형 신규도입)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유지

-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가족친화제도 경영실적 평가
  * 연차사용 및 유연근무제 활용, 자녀출산 및 양육 휴가 등 가족친화제도 적극 홍보 및 제도개선 검토
  * 가족친화 지수를 통한 가족친화경영실적 지속 관리
-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효기간 연장 추진
  * '18년 설명회 참석(3월), 유효기간 연장신청(6월), 서류/현장 심사(7~9월), 결과통보(12월)
  * 가족친화경영만족도 조사(7월, 근로자평가 가족친화지수 측정)

2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 (과제 3)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관리

<중기혁신방향>

'18년 계획	'19년 계획	'20년 계획	'21년 계획	'22년 계획
•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추진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직무가치 및 기능 분석	•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추진 완료 및 규정화 • 직무가치를 반영한 정원 산정모델 수립	•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수립 - 경력경로 재정비 - 직종체계 개선	•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 확대 - 경력개발경로와 연계된 인사 이동배치 기준 마련 - 직종체계 개선에 따른 제도정비	•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 고도화 - 직무분류 및 가치분석 재정비

<현실태 및 문제점>

❍ 고용양극화 해소를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 추진

-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제한 강화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요구
  * 높은 직무역량을 보유한 기간제 인력의 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 필요
  * 용역인력의 고용안정을 통한 직무몰입도 향상 필요
- 복잡한 인력구조와 급여체계의 점진적인 단순화 필요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근거한 직종 단순화 운영 필요
- 정규직 전환 및 전환인력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인사관리규정 정비

❍ 사업/기능별 담당부서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가 요구

- 국방개혁2.0 대응과 부서별 직무가치 및 기능 등 업무분장에 근거한 적정 정원 책정 및 관리 미흡
  * 「조직 및 직무분장 요령」에 근거한 정원운영 필요
-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 연간계획 수립 필요
  * '18년 연간 채용인력규모 계획 수립 등
- 정부인상율을 고려한 연봉표 설계 필요

<'18년 주요 추진계획>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 기간제 인력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수립 및 심의
  *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전환대상자 및 전환방식 결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심의
- 용역 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수립 및 심의
  *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협의 진행 및 결정
  * 용역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
-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규정 및 관련 규정 개정
- 비정규직 전환 정원 목표대비 획득율 90% 추진
  * 목표값 : '17년 고용노동부 전환계획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제출 정원 118명
  * 평가기준 : '18년 기재부 승인 비정규직 전환인력

❍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인적자원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국방R&D 수행체계 재구조화를 고려한 부서/기능별 인력정원 조정
  * 조직 및 직무특성을 고려한 정원 조정
- '18년 연간 채용인력 계획
  * 신규증원 인력, 임피제 별도정원, 정년퇴직 등을 고려한 연간 채용인력규모 계획 수립
- 차년도 정규직/기간제 기본연봉표 설계
  * 연차휴가 권고일수와 연계한 처우개선율 산출

□ (과제 4) 혁신성장 뒷받침

중·소 벤처기업 육성

<중기혁신방향>

'18년 계획	'19년 계획	'20년 계획	'21년 계획	'22년 계획
• 기술조사 완료 중소·벤처기업 수 (누적) : 50개 • 지원중인 중소벤처기업 국방매출액 : 4,083억 원	• 기술조사 완료 중소·벤처기업 수 (누적) : 150개 • 지원중인 중소벤처기업 국방매출액: 4,491억 원	• 기술조사 완료 중소·벤처기업 수 (누적) : 300개 • 지원중인 중소벤처기업 국방매출액 : 4,940억 원	• 기술조사 완료 중소·벤처기업 수 (누적) : 500개 • 지원중인 중소벤처기업 국방매출액 : 5,384억 원	• 기술조사 완료 중소·벤처기업 수 (누적) : 700개 • 지원중인 중소벤처기업 국방매출액 : 5,868억 원

<현실태 및 문제점>

❍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수준, 군 사업 참여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산화, 군 대상 홍보 등 단편적인 지원업무 수행
- 협약기업의 보유기술, 기술수준, 군 사업참여 의지, 경영여건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군 사업 참여 전략 수립이 필요

❍ 민간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 활성화 미흡

- 기존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능동적인 발굴 및 조사 수행 필요
-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18년 주요 추진계획>

❍ 맞춤형 지원을 통한 국방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유망 중소·벤처 기업 발굴을 위한 민간 중소·벤처기업 보유 기술 조사(11월)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현황 조사
  * 또한 기술전문가로서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국방 기술기획분야, 핵심부품국산화 등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수행
- 국방벤처센터별 육성 계획서 정교화 및 활용(10월)
  * 기업 분석 및 지원계획/방법 위주로 작성(기업별 효율적 국방사업 진입방안 수립)
  * 지역벤처 간 정보 교류 및 벤치마킹을 위한 육성계획서/결과 발표회 실시(2회)
- 중소·벤처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실시(10월)
  * 국산화, 군 대상 판로 개척 뿐 아니라 국방R&D 분야, 절충교역 등 연구개발/사업화 분야로 지원내용 다양화
  * 국방벤처 기업 획인서 발급, 수출관련 정보 제공 등 홍보 마케팅 지원 실시

❍ 우수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소개/설명회(10월)

  * 국방벤처 필요성 및 국방벤처 사업운영 공감대 형성 노력

  * 벤처기업 지원 예산증액 등 운영자원 확보 노력

- 국방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 실시 (7월)

  * 선정 시 취업 및 창업 연계 가능토록 아이디어 발굴

- 국방벤처 정보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11월)

  * 국방벤처실적 공유, 국방사업 성공·우수기업 제품 전시회, 우수기업/유공자 표창 등

-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추진 (11월)

  * 벤처기업협회, 각 군 군수사 등 국방벤처 사업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교류 확대

❍ 우수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반 견고화 및 사업화 실적 향상

- 민간 중소·벤처기업 기술조사 및 군 사업화 연계

  * 우수 중소·벤처기업 자료 확보 / 사업화 연계 : 40개 기업 / 4개 과제

- 국방 중소벤처 기업 사업화 실적 향상 : '17년 대비 10% 향상 추진

  * 국방매출(목표) : 4,083억원

□ (과제 5) 공정경제 기반 구축

사회형평 인사 실현

<중기혁신방향>

'18년 계획	'19년 계획	'20년 계획	'21년 계획	'22년 계획
●사회형평 채용 제도 도입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장애인 채용 확대 - 지역인재 의무 채용(18%) 실시	●사회형평 채용 제도운영·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제한 경쟁채용 5명 실시 (총 1.8% 목표) -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 확대(21%)	●사회형평 채용 제도 확립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제한 경쟁채용 5명 실시 (총 2.3% 목표) -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 확대(24%)	●사회형평 채용 선도적 실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제한 경쟁채용 5명 실시 (총 2.8% 목표) -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 확대(27%)	●사회형평 채용 선도적 실현 - 장애인 의무고용율 3.4% 달성 - 지역인재 의무 채용 30% 달성

<현실태 및 문제점>

❍ 사회형평 채용 강화 필요

- **장애인** 고용률 미흡 : '18년 상시근로자의 3.2%, '19년 이후 3.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기관은 3.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동법 제33조에 근거 의무고용률 미충족 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지역인재** 채용 확대 필요 : '18년 18%, 매년 3%씩 증가, '22년 이후 30% 채용의무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채용 기준 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의무가 있음.

<'18년 주요 추진계획>

❍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한경쟁 채용 실시

* '19년 정규직 채용 시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4명 할당
* 연평균 5명의 장애인 고용을 통해 5년 내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달성 목표

❍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 채용 실시

* '18년 정규직 채용 시 지역인재 제한경쟁채용 9명(50명 소요 기준) 할당
* 혁신도시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채용 비율 18% 달성 목표
* 매년 3% 지역인재 채용비율 증대를 통해 '22년 의무채용 비율 30% 달성 목표

3 국민 신뢰 회복

□ (과제 6) 윤리경영 강화

각종 부패근절 및 모니터링 확대(중점)

<중기혁신방향>

'18년 계획	'19년 계획	'20년 계획	'21년 계획	'22년 계획
• 청렴도 '2등급' 도약 • 부서장 리더십 교육 강화 • 청렴 마일리지 운영 개선 • 청탁금지법 자가진단 • 청렴 소통 활성화 강화 • 청렴/윤리 교육 지속 실시	• 청렴도 '2등급' 유지 • 전 직원 참여 활성화 강화 • 청렴마일리지 제도 고도화 • 청탁금지법 자가진단 강화 • 기관간 부패방지 협력강화 • 청렴/윤리 교육 확대	• 청렴도 '2등급' 유지 • 고위직 솔선수범 강화 • 최우수 기관 벤치마킹 • 청탁금지법 자가진단 강화 • 청렴옴부즈만 협력 강화 • 사회공헌 청렴 교육 실시	• 청렴도 '2등급' 유지 • 자체 반부패 시책개발 운영 • 공공기관간 부패방지 협력 • 부패 사례집 발간 • 청렴 캠패인 참여 활성화 • 사회공헌 청렴 교육 확대	• 청렴도 '2등급' 유지 • 부패신고 보상금 확대 • 지역사회 부패방지 협력 •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 민간협의회 참여 확대 • 청렴봉사대 조직화

<현실태 및 문제점>

❍ 정부/권익위의 부패척결 의지 강화

- 범 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 반부패 개혁을 통한 청렴한국 실현
- 방위사업 개혁 과제 33-③으로 윤리감사제도 도입 및 공정위 수준의 임직원 행동강령 도입 요구
- 청렴에 대한 민원인의 의식 향상 및 지속적 제도개선 요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원장 취임시 강력한 반부패 의지 표명

- 부정·부패행위 추방 및 부패행위자 엄단,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비리행위 강력 처벌

❍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경영 의지 표명

- 원장 복무계획, Ⅲ 발전전략, 4전략과제, 전략4, 4.2 고객중심의 투명성

❍ 내부청렴도(2등급→3등급) 하락으로 종합청렴도 답보 상태(3등급 유지)

- 내부청렴도 하락 원인
  -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 및 이행/실태점검 미흡
  - · 상하/동료/계층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미흡
  - · 부서(장)의 관행적인 불투명한 예산집행 또는 예산집행의 적절성 검토 미흡

<'18년 주요 추진계획>

❍ 청렴 정책 참여 및 청렴 거버넌스 운용을 통한 청렴생태계 조성

- 기관장 청렴 리더십 강화 및 구성원 청렴 추진과정 참여 확대(6건)
  · 기관장 집무실, 접견실, 대회의실 CCTV 설치 및 녹화
  · 원장 일정 직접 공개, 회의자료 공개범위 확대, 회의내용 속기/녹취
  · 고위직 청렴협의체 및 DTaQ 청렴추진 TF 구성
  · 감사 경력의 외부전문가로 구성·위촉된 자문위원회 운영(2회)
  ·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상임감사 제도 도입 추진
  · 청렴마일리지 운영 활성화로 우수부서/개인에 표창 및 포상금 수여
- 청렴정책 공조를 통한 청렴 거버넌스 운영 강화(2건)
  · 청렴 옴부즈만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활성화(5회)
    * 부패방지 시책 자문, 직무 감사 참여, 경남 혁신도시 청렴 옴부즈만 협의체 운영
  · 민관협의회 참여 활성화(2회)

❍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발요인 차단을 통한 부패위험 제거·개선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으로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3건)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해 원규 등 관련규정 개정 및 시행
    ※ 국내여비 실비 정산 등 5건
  · 전 직원이 함께하는『1부서 1제도개선』추진
    ※ 청렴추진 TF운영
  · 부패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강화(연중)
    ※ 법인카드・사업비 등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부서별 1회 이상), 클린 해피콜
-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행동강령 제도화 및 실태 점검(3건)
  · 윤리감사제도 도입 및 공정위 수준의 임직원 행동강령 마련
  · 개정 법령과 연계한 내부규정 내실화(수시)
  ·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 청렴교육 및 반부패 관련제도 홍보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C)

- 청렴교육 내실화로 청렴문화 지속 발전(2건)
  · 자체 청렴교육 강사 양성(1명)
  · 전 직원의 반부패·청렴교육 추진
    *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 등
    ※ 원내 교육 시 군수업체(중소업체)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참여 협조
-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2건)
  ·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분석 설문
  · 청탁금지법 준수 홍보(수시)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활성화 홍보

❍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한 청렴 및 부패방지 활동 성과·확산

-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4건)
  · 진주지역 감사협의회 참석(4회)
  · 경남 청렴 클러스터 등과 청렴, 반부패 협력 강화(수시)
    * 기품원 우수사례 전파 및 타 기관 수범사례를 통한 반부패 시책 벤치마킹
    *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에 원 참여 활성화
  · 국방분야 출연기관 간 청렴도/부패방지 협력 강화(2회)
  · 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 참여 활성화(2회)

□ (과제 7) 국민의 참여·협력 확대

정보공개 및 국민 참여 확대

<중기혁신방향>

'18년 계획	'19년 계획	'20년 계획	'21년 계획	'22년 계획
●국방개발 사업과제 및 성과물 탑재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시스템 구축	●국방개발 사업과제 및 성과물 탑재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 DB화	●국방개발 사업과제 및 성과물 대상 확대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 전수조사 및 최신화	●국방개발 사업과제 및 성과물 탑재 및 선별적 공개 확대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 공개 확대	●대국민 국방연구개발 정보 공개 서비스 고도화 ●국방연구시설장비 활용성 점검 및 발전계획 수립

<현실태 및 문제점>

❍ 국방개발 사업과제 선별적 공개 필요

- 국방개발사업과제 정보에 대한 선별적 공개를 통해 산학연 참여유도 필요

→ 국방R&D 과제/성과정보의 선별적 공개로 산학연의 국방R&D 참여 유도 및 민간 기술이전 촉진

- 국방연구시설·장비를 민간분야와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필요

* 국방분야 국정과제, 국방개혁2.0, 방산진흥실행계획 등 포함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 ('17.9) 및 업무시행

→ 국방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확대로 국방R&D 예산의 효율적 집행

❍ 국방기술정보(기술거래장터, 열린정보마당) 활용도 확대 필요

- 민간 기술이전 촉진 및 국방R&D 산학연 참여 확대를 위해 국방기술거래장터 및 DTiMS 열린정보마당 서비스 활성화 필요

* 국방개발 사업과제 및 성과(논문,특허) 등 대내/외 공개('17년 약1,500건 탑재) 실시

→ 국방과학기술정보 공개를 확대 추진하여 국방R&D 참여 유도 필요

<'18년 주요 추진계획>

❍ 국방개발 사업과제 선별적 공개(A)

- 국방개발 사업 과제 및 성과물 탑재(약 1,400건)

  * 내용 : 핵심기술후보과제, 국방R&D과제, 국방R&D성과(논문/특허)

  * 대상 : 인터넷 열린정보마당

- 국방분야 최초로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종합관리 하는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컨텐츠 탑재 포함)(~11월)

  * 내용 : 국과연, 기품원 보유 연구시설장비정보 수집(약 2,000점) 및 산학연 공유

  * 주요기능 : 시설장비 정보관리, 중복성 검토, 운영·유지

❍ 국방기술정보(기술거래장터, 열린정보마당) 활용도 확대(B)

- 인터넷 국방기술거래장터 및 DTiMS 열린정보마당 이용 횟수가 증가하도록 노력 추진

  * 내용 : 전년도 페이지뷰수(241만건) 기준으로 매년 이용횟수가 증가하도록 목표설정

  * 대상 : 인터넷 열린정보마당, 국방기술거래장터 등